

Analysis of Youth Policy Implement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cusing on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in 「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Ko, Piljae¹⁾ · Beak, Seunghun²⁾ · Kim, Yongjin³⁾

¹⁾Ph.D. students,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²⁾Master's students,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³⁾ Researcher, Institute of Teaching and Learning, Seokyeong University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check whether the currently implemented youth policy is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basic plan,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including summative and process evaluation elements is need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i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basic plan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reviewing and inspecting the plans and procedures shown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of 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Methodology: From 2018 to 2021,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areas were selected from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composed of previous studie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projects decreased in 2021 compared to 2018, but the project budget increased. There were 20 projects that showed specificity in budget changes, of which only four specified the reasons for the change. In terms of whether performance goals are achieved, a number of projects without performance indicators and projects with changed performance indicator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examining four indicators corresponding to the areas of participation and rights among the main indicators of the current basic plan, two decreased and two increased in 2020 compared to the existing score. Five legal amendments were confirmed as fac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basic pla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rganize an appropriate budget, and if chang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valid reason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 more valid performance indicators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that meet the purpose of each policy.

Keywords: Youth Policy Basic Plan,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Kim, Yongjin

Researcher, Institute of Teaching and Learning, Seokyeong University

124, Seogyong-ro, Seongbuk-gu, Seoul, 02713,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1-6294-083X>

Email: yongkim@skuniv.ac.kr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March, 28, 2022 **Accepted:** March 28, 2022 **Publication:** March, 31, 2022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참여·권리영역을 중심으로

고필재¹⁾ · 백승훈²⁾ · 김용진³⁾

¹⁾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²⁾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과정

³⁾서경대학교 교육혁신처(교수학습원), 연구원

배경: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괄평가와 과정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검토 및 점검하여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 중 청소년참여·권리영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분석 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사업 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줄어들었으나 사업예산은 증가하였다. 각 사업 중 예산 변화에 특이 여부를 보인 사업은 20개였으며 이 중 4개만이 변화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성과지표가 없는 사업, 성과지표가 변경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지표 중 참여·권리영역에 해당하는 4개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존대비 2020년에 2개는 감소하고, 2개는 증가하였다. 대내외 변화요인으로는 5개의 법 개정을 확인하였다.

시사점: 기본계획에 기초한 연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평가, 시행 분석

교신저자: 김용진

서경대학교 교육혁신처(교수학습원) 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헤인관 1층(정릉동, 서경대학교)

ORCID: <http://orcid.org/0000-0001-6294-083X>

Email: yongkim@skuniv.ac.kr

투고일: 2022. 2. 28. **심사일:** 2022. 3. 28. **게재확정일:** 2022. 3. 28. **발행일:** 2022. 3. 31.

I. 서 론

청소년정책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된 지 29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이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1]. 해당 계획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총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참여와 권리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권리보장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2], 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이라는 정책영역이 신설(확대)되어 중점과제가 수립된 이후로 이 정책 기조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해당 사업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체계적으로 집행·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정책전달체계의 한계, 정보공개 등의 어려움으로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도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추진하는 과제들의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평가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차기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듯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이 정책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점차 높아지는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관심도와 요구에 대한 국가의 응답으로 정책 및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평가가 제도화된 이후에는 2015년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3].

기존의 연구들은 지표 개발,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체계 위주의 성격이 강했으며, 사후성격을 가지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이 애초 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는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한 연구 등 실질적인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과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참여·권리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점검하여 향후 수립될 시행계획 및 중장기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청소년정책의 시행사업과 예산은 어떠한가. 둘째,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셋째, 중앙(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넷째, 정책의 대내외 변화요인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은 학자나 이해관계자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공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흔히 정의되고 있다. 즉,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당위성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대안을 탐색하여 공식절차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행동지침을 의미한다[4].

일반적인 정책의 개념을 위에 제시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청소년정책은 정부가 해결하거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상이 청소년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평가방식에 더해(특히) 영미 계통의 국가들은 과정평가와 연계되어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5]. 이러한 관점은 예산편성의 근거를 찾아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함이며, 그 정책의 효과가 당초 목적(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에는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의 정책결정자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의 설득과 지지를 얻고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책의 대응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정책평가는 과거 예산 투입 중점의 관점에서 정책을 통한 결과물 즉, 성과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발전하였다[6]. 따라서 정책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의 산출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작동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

답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과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연구[7]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기획자의 의도와 정책실행자 간의 간극을 줄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오류를 줄이는 것[4] 역시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policy)’과 ‘평가(Evaluation)’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는 정부 부문에서 수립·실시하는 공공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행역량과 책무성 강화를 도모[4]하는 한편, 정책이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행 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난 개념이라 볼 수 있겠다.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분석 틀을 설정하는데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성운숙, 임희진[8]은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정성평가는 참신성, 집행(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지속성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김형주 외[9]는 청소년 정책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을 정책형성, 정책과정, 정책성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형성, 과정, 성과에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2015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3]. 이어 2017년에는 2차 시범 평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3, 8, 9],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과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평가의 수요도 크게 늘어 관련 지표 개발, 평가 방법 및 결과 피드백 등 주로 정책분석 및 평가제도의 체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기존의 연구들은 평가영역을 형성, 집행(또는 과정), 성과로 구분하여 정책 종결 시점에서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정책평가는 성과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참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평가가 연간단위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소 추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10, 11]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Gilsing[12]이 아동,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과가 표출되어 시간 지연(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Ⅲ. 연구내용

앞장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평가 시기가 사후성격을 가지는 총괄 평가적(summative evaluation)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점검하는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의 요소 또한 필요하다.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고려한 분석 기준과 방법을 선정하였다.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각 연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 중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목표(영역)에 속한 3개 세부과제에 기반을 둔 사업이다. 다만, 시행계획만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각 연도 시행계획 이외에 청소년백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자료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정보	2018~202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발간자료	청소년백서(2018~2021 / 여성가족부)
기타 참고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보고서

2. 분석내용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정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교육학 박사 2인, 청소년지도학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이 자료 원문 전체를 읽는 한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분류 체계는 기초항목과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평가과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선행연구의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즉, 해당 과제가 본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인 기간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논문 분석 틀은 <표 III-2>와 같다.

가. 기초항목

각 연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기본정보와 세부 유형 등을 확인하는 등의 기초항목을 분석하는 한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 중 현재까지 공개된 2021년까지의 연도별 시행과제와 예산액, 담당부처를 수집하여 과제 추진의 지속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초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세부과제의 계획 · 집행 및 결과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나. 정책형성 및 집행

정책형성 및 집행영역은 기초항목을 기반으로 추적한 과제들의 집행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성과지표(목표치)를 살펴보는 한편, 개선사항이 차기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변화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증감 여부와 사업량과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변화 특이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다. 정책 평가(성과)

정책평가(성과)의 경우, 해당 시행과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6차 기본계획상에 명시한 주요 성과지표와 대내 · 외 변화요인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화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고려하여, 입법부에서 논의된 법률 개정사항의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변화요인 탐색의 일환으로, 입법부의 결정으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표 III-2〉 분석 틀

구분	세부항목	내용
기초항목	기본정보	· 시행연도(2018-2021) · 과제(사업명) 예산액
	세부 유형	· 담당부처
정책형성 및 집행		· 사업예산의 현황(증감 여부)
		· 예산 변화 특이 여부(전년 대비 50% 이하 또는 200% 이상)
정책 평가(성과)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정책목표 달성 여부
		· 중앙(기본계획) 성과지표 변화추이
		· 대내외 변화요인

IV. 연구결과

1. 시행사업 수 및 예산액

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목표(영역) 개요

본 연구에서는 분석 틀에 따라 25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참여·권리영역에 시행사업을 제시한 12개의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 수와 예산을 확인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목표의 시행사업 수 및 예산액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먼저 해당 정책목표와 관련한 전체 시행사업 수는 2018년(68개)에 비해 2021년(66개)에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확대(세부과제 1-1) 관련 사업 수가 2018년(10개) 대비 증가(12개)하였으며,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세부과제 1-2) 사업 수는 2018년(36개) 대비 감소(33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세부과제 1-3) 사업 수는 2018년(22개) 대비 2021년(21개)에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2018 ~ 2021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세부과제별 예산
(단위 :건, 백만원)

세부과제명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계	68	81,063	69	86,832	66	91,918	66	87,961	
1-1 청소년 참여확대	10	17,119	12	18,603	12	7,607	12	6,450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36	45,412	36	47,480	33	62,264	33	58,382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22	18,532	21	20,749	21	22,047	21	23,129	

먼저,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총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1, 2]. 해당 기관이 제출한 세부과제의 수는 총 66개로 여성가족부가 31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3개, 문화체육관광부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순이었다. 1개 과제를 제출한 기관도 4곳으로(법제처, 행정안전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확인되었으며, 참여 · 권리영역의 시행사업이 특정 부처에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세부사항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2018년 ~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사업수 및 예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8년 사업	2018년 예산	2019년 사업	2019년 예산	2020년 사업	2020년 예산	2021년 사업	2021년 예산	비고
계	68	81,063	69	86,832	66	111,918	66	87,961	
여성가족부	30	27,747	31	32,307	31	52,089	31	47,616	
교육부	15	10,687	15	9,416	13	27,912	13	8,343	
문화체육관광부	5	7,674	5	6,524	5	8,095	5	8,182	
보건복지부	4	6,700	4	8,500	3	4,392	3	4,419	
법무부	2	230	2	230	2	230	2	120	
고용노동부	1	1,013	1	927	1	927	1	1,033	
방송통신위원회	2	6,116	2	6,845	2	6,995	2	7,112	
농림축산식품부	2	5,504	2	5,084	2	5,084	2	4,884	
식품의약품안전처	4	656	4	625	4	490	4	487	
통일부	1	3,908	1	4,478	1	4,459	1	4,370	
행정안전부	1	10,421	1	11,465	1	845	1	845	
법제처	1	407	1	431	1	400	1	550	

다음으로 시행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체 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2018년(81,063백만원) 대비 2021년(87,961백만원)까지 점진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에 제시한 세부과제별 사업 수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 1-1의 경우, 사업 수는 2019년 이후 12개로 유지되고 있음에 비해 관련 예산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부과제 1-3의 경우 사업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과제 1-2의 경우, 2020년까지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소년 참여확대(세부과제 1-1)

분석 틀에 따라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중 예산의 변화를 보인 사업은 5개이다.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2020년 사업(전년대비 7.4%), 교육부의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2020년 사업(전년대비 24.0%), 여성가족부의 ‘일상생활에서의 참여활성화’ 2019년 사업(전년대비 40.0%)과 2021년 사업(전년대비 0%)으로 확인되었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2020년 사업(전년대비 213.3%), ‘일상생활에서의 참여활성화’ 2020년 사업(전년대비 1356.7%)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사업은 2019년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있었으나 2020년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사업과 동일예산으로 순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변화 사유를 명시한 사업은 2건으로, 먼저 감소 사유를 명시한 사업은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사업으로 변화근거를 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지방 이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증가 사유를 명시한 사업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여활성화’로 2020년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의 분야별 규모 미지정에 따라 사업 전체 예산액 작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세부과제 1-1 예산변화 특이여부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18년 예산	19년 예산 (전년대비)	20년 예산 (전년대비)	21년 예산 (전년대비)	비고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행정 안전부	10421	11465 (110.0%)	845 (7.4%)	845 (100.0%)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여성 가족부	150	150.5 (100.3%)	321 (213.3%)	321 (100.0%)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1-1-3)		신규 0	0	(순증)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교육부	신규 2547	2500 (98.6%)	600 (24.0%)	515 (85.8%)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일상생활에서의 참여활성화	여성 가족부	150	60 (40.0%)	814 (1356.7%)	0 (0%)	

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세부과제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예산의 변화를 보인 사업은 8개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2019년 사업(전년대비 6.1%)과 2021년 사업(전년대비 34.0%),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020년 사업(전년대비 49.0%), 교육부의 ‘청소년 연예인(학생)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2020년 사업(전년대비 0%),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2019년 사업(전년대비 0%),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 조사 및 관리’ 2019년 사업(전년대비 0%)이 감소하였다. 급격히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2020년 사업(전년대비 247.9%), 교육부의 ‘청소년 연예인(학생)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2021년 사업(순증),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2020년 사업(전년대비 250.0%),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2019년 사업(순증)과 2021년 사업(전년대비 977.8%)이 증가하였다.

〈표 IV-4〉 세부과제 1-2 예산변화 특이여부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18년 예산	19년 예산 (전년대비)	20년 예산 (전년대비)	21년 예산 (전년대비)	비고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여성 가족부	1994	121 (6.1%)	300 (247.9%)	102 (34.0%)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 가족부	200	190 (95.0%)	93 (49.0%)	96 (103.2%)	
	청소년·연예인(학생)운동선수 기본권보호 강화	교육부	680	680 (100.0%)	0 (0%)	680 (순증)	
1-2-2.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특성화 고등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산업체 관리강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신규 1500	1000 (66.7%)	2500 (250.0%)	1500 (60.0%)	
1-2-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교육부	25	0 (0%)	0	0	
1-2-4. 청소년정신건강권 보호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교육부	2938	936 (31.9%)	1182 (126.3%)	1215 (102.8%)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보건 복지부	신규 200	0 (0%)	종료	-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교육부	0	170 (순증)	90 (52.9%)	880 (977.8%)	

위의 <표 IV-4> 내용 중 변화 사유를 명시한 사업은 2건으로, 감소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 연예인 (학생)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로 기존 교육부 특별교부금 형태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분담으로 확인되었다. 증가와 감소가 모두 확인된 사업인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은 각종 실태조사의 주기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이 크게 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의 2019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일부 이월하여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청소년 연예인 (학생)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사업의 경우 2020년 시행계획에 예산 감소 사유를 기존 교육부 특별교부금 형태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하여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1년 시행계획의 예산을 보면 예산의 구분은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의 형태로 2018년, 2019년과 동일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라.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세부과제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중 변화를 보인 사업은 7개의 사업이다. 먼저 감소를 보인 사업은 교육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2020년 사업(전년대비 29.4%),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2019년 사업(전년대비 0%),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 교육을 위한 지도자 연수 실시’ 2020년 사업(전년대비 8.9%),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2019년 사업(전년대비 22.2%)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증가한 사업은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2019년 사업(전년대비 1400.0%)과 2020년 사업(전년대비 666.7%),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2019년 사업(전년대비 17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2019년 사업(순증), ‘청소년 인성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2021년 사업(전년대비 300.0%),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연수 실시’ 2019년 사업(전년대비 290.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업들은 모두 예산 변화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감소를 보인 사업이 모두 교육부의 사업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사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세부과제 1-3 예산변화 특이여부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18년 예산	19년 예산 (전년대비)	20년 예산 (전년대비)	21년 예산 (전년대비)	비고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확산)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부	신규 15	210 (1400.0%)	1400 (666.7%)	1485 (106.1%)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1000	1700 (170.0%)	500 (29.4%)	400 (80.0%)	
1-3-2.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양성평등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교육부	신규 25	0 (0%)	340 (순증)	340 (100.0%)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 년지도자 연수 실시	여성 가족부	600	1740 (290.0%)	1772 (101.8%)	1474 (83.2%)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교육부	20	20 (100.0%)	20 (100.0%)	60 (300.0%)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 자 연수 실시	교육부	407	407 (100.0%)	36 (8.9%)	36 (100.0%)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19년부터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언어폭력 및 중점학교를 통합)	교육부	450	100 (22.2%)	100 (100.0%)	100 (100.0%)	

2. 시행사업 목표 달성여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시한 사업목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목표치와 실적치를 확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제시한 시행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확대(세부과제 1-1)

청소년 참여확대(1-1과제)의 시행사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는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6〉 세부과제 1-1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여성 가족부	청소년참여 위원회 개소수	목표치	226	230	235	241	
			실적치 (%)	101.8	101.3	102.1	-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어울림마당 운영횟수	목표치	(변경)	5회이상	5회이상	5회이상	
			실적치 (%)		100.0	100.0	-	
		동아리 활동지원	목표치	(신설)	2,500	2,500	2,500	
			실적치 (%)	100.0	100.0	-		
청소년참여 내실화	여성 가족부	취약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침 시달	목표치	1회	1회	1회	1회	
			실적치 (%)	100.0	100.0	100.0	-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행정 안전부	NEIS 제공 건수	목표치	527만	552만	607만	246만	
			실적치 (%)	225.2	109.6	36.9(▲)	-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여성 가족부	청소년특별 회의 참여자 만족도	목표치	86.8	86.8	23(변경)	30	제안 건수
			실적치 (%)	100.0	100.0	143.5	-	
학생자치법정 확대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만족도결과	목표치	87.4	89	89	89	
			실적치 (%)	99.5(▲)	97.1(▲)	100.6	-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정 책에 대한 참여활성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생자치 활동 관련사업	목표치	(신설)	85	85	5(변경)	우수 사례
			실적치 (%)		100.0	-	5	
		학생회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표치	(신설)	입법	입법	입법	
			실적치 (%)		-	-	-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 견수렴 활성화	여성 가족부	참여포탈 페이지뷰(연간)	목표치	130,000	130,000	145,000	155,000	
			실적치 (%)	78.5(▲)	107.9	106.5		

〈표 IV-6〉 세부과제 1-1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 (계속)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여성 가족부	청소년특별 회의	목표치	86.8	86.8	23(변경)	30	(중복)
			참여자 만족도	실적치 (%)	100.0	100.0	143.5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청년)	여성 가족부	분과회의(청년) 횟수	목표치	(신설)	6	15	24(변경)	Proj 수
				실적치 (%)		550.0	280.0	-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 성화	여성 가족부	참여 프로젝트 공모·지원 건수	목표치	75	30	30	-	종료
				실적치 (%)	100.0	110.0	156.7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운영 지자체	목표치			-	10	
				실적치 (%)	(신설)		600.0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	지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개소수	목표치	이첩	13	10	4		
			실적치 (%)		☞1-3-2	23.1(▲)	0(▲)		-

성과목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업은 1개로,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동아리·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 내실화’(여성가족부)사업은 목표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청년)’(여성가족부)사업은 성과지표에 변화를 준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참여 활성화’(여성가족부)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던 방법을 종료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형식을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세부과제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의 시행사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IV-7>부터 <표 IV-10>까지 제시하였다. 먼저, 인권·권익 세부사업부터 자세히 확인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는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목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은 2개로,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및 법제도 개선’(문화체육관광부)사업,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지원’(여성가족부)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여성가족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가 없거나 형식적인 지표를 제시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3개) 이러한 지표는 제도개선 노력, 조사 추진 등 집행 자체만의 의의를 두는 성격이 강했다.

〈표 IV-7〉 세부과제 1-2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1)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	목표치	1회	1회	1회	1회	
			실적치(%)	100.0	100.0	100.0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철저한 이행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인식도	목표치	88.2	87.4	89.0	87.5	
			실적치(%)	99.3(▲)	101.8	97.5(▲)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여성가족부		지 표 없 음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책임자 회의 실시	목표치	19	21	21	21	
			실적치(%)	126.3	100.0	176.2	-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권리교육 인원 (청소년, 지도사)	목표치	16,000	20,000	20,000	20,000	
			실적치(%)	106.3	104.7	115.2	-	
청소년·연예인(학생)운동 선수기본권 보호 강화	교육부	e-school 시스템 구축·운영	목표치	39,200	46,500	46,500	48,000	
			실적치(%)	117.4	102.3	102.3	-	
청소년·연예인(학생)운동 선수기본권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인권교육 대상자 수	목표치	42,522	45,000	45,000	45,000	
			실적치(%)	104.6	92.0(▲)	103.5	-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및 법·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대상 교육 / 상담 프로그램 횟수	목표치	250	300	480	500	
			실적치(%)	117.2	158.3	175.4	-	
1-2-2.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지원	여성가족부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해소율	목표치	70	87	88.5	88.6	
			실적치(%)	121.4	101.4	100.0	-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점검·단속)	여성가족부	점검 업체수	목표치	500	500	500	300	
			실적치(%)	100.0	100.0	50.0(▲)	-	코로나
근로 권익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여성가족부		지 표 없 음					

〈표 IV-7〉 세부과제 1-2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1) (계속)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2-2.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근로 권익 보호의식 확산 및 정보제공 확대	여성가족부	아르바이트 안내서 배부업체	목표치	100,000	150,000	150,000	150,000	
				실적치(%)	150.0	126.7	193.3	-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최저 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 로현장 점검·단속	고용노동부	노동절서 사업장 감독 실시율	목표치	7,000	10,000	10,000	12,000	
				실적치(%)	101.7	1010.5	100.8	-	
			최저임금 사업장	목표치	5,000 (신설)				지 표 통 합
			감독 실시율	실적치(%)	101.6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 년 근로현장 점검·단속(특 성화고 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산업체 관리강화 및 체계구축)	교육부	지도·점검 업체수	목표치	2,000	3,000	4,000	4,000	
				실적치(%)	156.8	118.7	101.2	-	
			hifive 시스템에 기업관리 구축	목표치	20,000	20,000	20,000	25,000	
				실적치(%)	61.3(▲)	112.6	106.8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과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의 목표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권리(체계적실태관리)’(여성가족부)사업의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진행한 사업 중 성과지표가 전문기관 연계율인 2개의 사업은 모두 목표치를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여성가족부),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관리 및 지원 강화’(보건복지부) 사업은 지표 변경 또는 지표 신설로 연속적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어 과제 추적에 한계가 있다(<표 IV-8> 참조).

끝으로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관련 사업에서 목표치가 증가한 사업은 3개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교육부) 중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율의 성과지표, ‘건강한(건강한) 식생활 확산(신체 건강권 보장)’(농림축산식품부),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치가 감소한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교육부) 중 영양상담실 설치 및 운영율의 성과지표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 외 사업은 목표치에 변화가 없거나, 지표 변경, 미실시, 사업종료로 나타나 증가 감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표 IV-9> 참조).

〈표 IV-8〉 세부과제 1-2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2)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2-3.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인원	목표치	128,202	72,519	91,619	65,000
				실적치(%)	100.0	125.1	71.8(▲)	-
	문화가 있는 날 '동동동 문화놀이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진행 횟수	목표치	180	185	150	150
				실적치(%)	102.8	108.6	98.7(▲)	-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놀이정책 수립	목표치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정책수립
				실적치(%)	-	-	-	-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교육부	학생권리 보장 법제화 방안	목표치	정책연구	근거마련	근거마련	근거마련
				실적치(%)	-	-	시행령 개정	-
1-2-4. 청소년 정신건강권 보호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적 실태관리)	여성가족부	정신건강 상담실적	목표치	118,450	160,000	165,000	195,000
				실적치(%)	126.8	101.9	118.2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위험지수 감소율	목표치	20.7	23.3	지표변경	
				실적치(%)	123.7	110.3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입교생 심리검사 변화율	목표치	지표변경		18.2	18.9
				실적치(%)			104.9	-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정신건강 상담실적	목표치	118,450	160,000	지표변경	
				실적치(%)	126.8	101.9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교육부	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	목표치	81.5	82.5	81	79
				실적치(%)	100.9	97.5(▲)	96.4(▲)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교육부	전문기관 연계율	목표치	78	76.5	81	79
				실적치(%)	97.8(▲)	99.7(▲)	96.4(▲)	-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를 통한 DB마련	목표치	1	1	1	(종료)
				실적치(%)	100.0	100.0	100.0	
	정신건강 관심군 관리 및 지원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효과율	목표치	59.2	65	85.5	(종료)
				실적치(%)	153.7	136.8	-	
	정신건강 관심군 관리 및 지원강화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초기중재 센터	목표치	지표 신설		7	12
				실적치(%)			100.0	-

〈표 IV-9〉 세부과제 1-2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3)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 가족부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목표치	9,000	8,800	6,100	5,000	
			실적치(%)	58.0(▲)	68.9(▲)	49.6(▲)	-	
청소년(건강증진) 위생용품 지원	여성 가족부	보건위생용품 지원인원	목표치	90,000	80,000	75%(변경)	76	지표 변경
			실적치(%)	112.7	125.0	115.6	-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 경 조성	여성 가족부	위생점검 적합률	목표치	99	99	99	99	미 실시
			실적치(%)	99.3(▲)	101.0	0(▲)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학 교의 건강관리역량 강화)	교육부	건강증진학교 운영 개수	목표치	32	32	지방사무로 이양		(종료)
			실적치(%)	100.0	146.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교육부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율	목표치	82	83	84	99	
			실적치(%)	101.2	101.6	0	-	
		영양상담실 설치 및 운영율	목표치	99.6	99.6	99	99	시
			실적치(%)	99.7(▲)	99.2(▲)	100.0	-	
건강한(건강한) 식생활 확산 (신체 건강권 보장)	농림축산 식품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목표치	365	440	452	545	
			실적치(%)	119.5	114.5	120.1	-	
소년원 재원생 대상 건강검진 지원 강화	법무부	사업참여 기관수	목표치	11	11	11	11	
			실적치(%)	100.0	100.0	100.0	-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 품안전처	영양교육 수혜율(%)	목표치	7	7.4	7.8	8.0	
			실적치(%)	101.4	102.7	101.3	-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수련시설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 품안전처	수련시설 합동 지도·점검횟수	목표치	1	1	1	1	미 실시
			실적치(%)	100.0	100.0	0(▲)	-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집단급식 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식품의약 품안전처	집단급식소 합동 점검 횟수	목표치	2	2	2	2	
			실적치(%)	100.0	200.0	100.0	-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청소년 먹거리 안전확보)	식품의약 품안전처	계획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	목표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실적치(%)	100.0	100.0	100.0	-	

다.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세부과제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과제의 시행사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IV-10>부터 <표 IV-12>까지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중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2019년까지 초·중고 학생의 교육 인원을 합산한 결과에서 2020년부터 지도자를 포함한 인원을 합산하여 실적치가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는 학습자료를 구성하고 운영학교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상황이해 및

수용성 제고'(교육부)사업의 성과지표 중 단위학교는 줄고 있으나 교(원)장의 연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일반청소년과의 교류 촉진/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통일부)사업, '어린이·청소년 법제관'(법제처)의 목표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방송통신위원회)사업은 목표치가 유지되고 있다.

〈표 IV-10〉 세부과제 1-3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1)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다문화이해교육	여성 가족부	교육 연인원	목표치	45000명	48000명	43000(변경)	152000명	
			(초중고+지도자)	실적치(%)	97.7	87.8	337.1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민주시 민교육 확산)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수	목표치	1	3	단위사업 종료		
				실적치(%)	100.0	-			
			운영교(수)	목표치	(변경)		51교	지표	
				실적치(%)			425.5	변경	
	우수사례 발굴 건수	교육부	목표치	(변경)		20건			
			실적치(%)			-			
	사회통합을 위한 상화이해 및 수용성 제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부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학교 수	목표치	200교	200교	300교(변경)	250교	
				실적치(%)	100.0	143.5	89.0	-	
	교육연구학교 운영 학교 수	교육부	목표치	17교		미지정			
			실적치(%)	-	100.0				
	사회통합을 위한 상화이해 및 수용성 제고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실시)	교육부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목표치	85%	지표 변경			
				실적치(%)	-				
	통합학교 교(원)장의 연수 이수 실적	교육부	목표치	70%(변경)	80%	85%	88%		
			실적치(%)	112.1	105.0	102.9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일 반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통일부	교육 프로그램 횟수	목표치	35회	35회	종료		
				실적치(%)	102.9	-			
	대안학교 지원 사업수혜 학생수	통일부	목표치	260명	260명	290명	320명		
			실적치(%)	101.2	108.5	109.0	-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전체 만족도	목표치	90%	90%	92%	92%	
				실적치(%)	101.1	104.3	100.0	-	
	청소년법제관 전체 만족도	법제처	목표치	90%	90%	92%	92%		
			실적치(%)	101.1	103.9	99.0	-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참여학교수	목표치	450개교	450개교	450개교	350개교	
				실적치(%)	100.0	100.0	95.3	-	
			찾아가는 교육뮤지컬 교육횟수	목표치	100회	100회	100회	100회	
				실적치(%)	101.0	101.0	100.0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참여학교수	방송통신 위원회	목표치	300(신규)	260개교	480개교	250개교		
			실적치(%)	100.0	104.6	111.3	-		

다음으로 <표 IV-11>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의식 제고 관련 사업은 대부분 목표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학교 폭력예방교육 강화)’(여성가족부)의 목표치는 수렴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교육부)은 개발과 보급 적용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대학 예방교육 강화)’(여성가족부)사업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실제사업의 운영과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V-11> 세부과제 1-3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2)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3-2.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성교육 강화 (청소년성문화센터 활성화)	여성 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인원	목표치	2257천명	2259천명	2299천명	2268천명	
				실적치(%)	101.6	109.6	44.8	-	
	청소년을 위한 양성 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여성 가족부	대중매체 모니터링(회)	목표치	4	14	17	17	
				실적치(%)	300.0	121.4	100.0	-	
	청소년 대상 젠더폭 력 예방교육(학교 폭 력예방교육 강화)	여성 가족부	만족도 조사(점)	목표치	81.2	86.2	84.2	85.2	
				실적치(%)	105.0	98.6	103.6	-	
	청소년 대상 젠더폭 력 예방교육(대학 예 방교육 강화)	여성 가족부		지 표 없 음					
	청소년을 위한 양성 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양성평등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 준 개정 및 활용)	교육부	매뉴얼 개발·보급	목표치	개발· 보급	보급	단위사업 종료		
				실적치(%)	개발	보급완료			
			P/G, 가이드라인 개발 자료 건수	목표치			2건	2건	
				실적치(%)			150.0	-	

끝으로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은 보수교육 또는 연수 관련 목표치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할 점으로 포상이나 공모사업, 연구 작품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은 선도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목표치 30에 실적치 353.3%로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 IV-12> 참조).

〈표 IV-12〉 세부과제 1-3 사업별 성과목표 및 달성 여부(3)

과제 번호	사업명	부처	성과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성 가족부	인성관련 공모프로그램 수	목표치	11개	5개	5개		지표 변경
			실적치(%)	100.0	140.0	140.0		
		공모사업 지원 실적보고서	목표치		지표변경			27개
			실적치(%)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여성 가족부	우수사례 포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목표치	2점 포상	2점 포상	2점 포상	2점 포상	
			실적치(%)	100.0	100.0	100.0	-	
청소년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연수 실시	여성 가족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만족도	목표치	85.4				
			실적치(%)	-				
		상담사 보수교육 참가자(명)	목표치	4300명	4000명	4300명	4500명	
			실적치(%)	98.7	108.0	104.0	-	
지도사 보수교육 참가자(명)		목표치	2000(변경)	2000명	2100명	2000명		
		실적치(%)	103.0	111.9	118.8	-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 한 노력	여성 가족부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목표치	고지실시	고지실시	고지실시	고지실시	5.10.
			실적치(%)	100.0	100.0	100.0	-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교육부	연구대회 출품작품수	목표치	280편 이상	240편 이상	230편 이상	190편	
			실적치(%)	85.7	94.2	78.3	-	
청소년 생활지도 및 인성교 육을 위한 지도자 연수 실시	교육부	연수 만족도 (5점 만점)	목표치	4.2점	4.3점	4.6점	4.5점	
			실적치(%)	108.1	108.1	93.5	-	
청소년 언어문화 향상을 위 한 노력(19년부터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학교와 언어폭 력 및 중점학교를 통합)	교육부	선도학교 운영(중점)학교	목표치	150개교	200(변경)	9000개교		
			실적치(%)	100.0	2253.0	모든학교		
		언어폭력예방 우수사례(건)	목표치		언어폭력예방 중점학교		9중	
			실적치(%)		미운영으로 지표 변경		-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개소수	목표치	9				
			실적치(%)	-		19년부터 1-1-3으로 변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자유학기(학년)제, 미디어교 육)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목표치	417	350	320	550	예산 축소
			실적치(%)	95.0	88.3	158.1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체육 관광부	프로그램 운영 횟수	목표치	30회	30회	30회	50회	
			실적치(%)	120.0	70.0	353.3	-	
		프로그램 개발 건수	목표치	1건	1건	1건	1건	
			실적치(%)	100.0	100.0	100.0	-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중 자료 확보의 어려운 1개를 제외한 최상위 지표 1개 참여 · 권리영역의 지표 3개의 주요지표의 출처와 측정산식은 <표 IV-13>과 같다.

이어서 제시한 <표 IV-14>는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성과에 도달한 지표는 2개로 ‘청소년 참여 보장수준’,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지표로 나타났다. 이 중 ‘참여 보장수준’ 지표는 점증적으로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지표는 최상위 지표인 ‘주관적 행복감’과 영역 지표인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총 2개로 나타났다.

<표 IV-1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주요)지표

영역 및 주요지표명	측정산식	목표치	출처
최상위 주관적 행복감	OECD 기준, 100점을 국가평균으로 했을 때 한국의 행복감 점수	100.0	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2016)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보장수준	초4 - 고3 대상,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참여를 보장받다고 응답한 비율	65.0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7)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초4 - 고3 대상,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80.0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7)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초4 - 고3 대상, 인권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75.0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7)

<표 IV-14> 주요지표 추이

영역 및 주요지표명	기존	18년	19년	20년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상위 주관적 행복감	82.0	87.6	94.7	79.5	100.0	OECD 국가평균(100.0)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보장수준	60.7	62.2	68.6	71.0	65.0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추이 반영
	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77.3	77.9	77.1	83.7	80.0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추이 반영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66.6	70.2	46.0	46.5	75.0	'17년 조사결과 및 최근추이 반영

4. 대내외 변화요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참여·권리영역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을 비롯한 변화내역은 총 5건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3건, 공직선거법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참여, 권리증진 등의 내용이 4건이며, 나머지 1건은 청소년 노동권리(인권)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15> 참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중점과제인 ‘청소년 참여 확대(1-1)’와 그 맥락을 같이하며,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시행사업을 제시한 <표 IV-6>의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확대(1-1-1)’, ‘청소년참여방식 다변화(1-1-3)’의 세부사업 등과 관련된다.

<표 IV-15> 2018년 ~ 2021년 법령개정노력(외부변화요인)

구분	법령명	내용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명시('17.12. 제정, '18. 6. 시행)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촉 근거 마련('18.12. 제정, '19. 6. 시행)
3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권 연령을만 18세로 내림('19. 12. 27.)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마련('20. 5. 제정, '20. 11. 시행)
5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림('21. 12. 3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는 기존 정책평가의 개념에 과정평가의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중 청소년 참여·권리 영역을 기초항목(기본정보, 세부유형)과 정책형성 및 집행, 평가(성과) 과정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개설된 사업은 총 69개로 나타났고, 2019년 신규 사업이 1개, 2020년 종료된 3개 사업을 제외하고 65개의 사업이 4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세부과

제 예산의 변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의 방향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렇듯 예산과 성과목표 변동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매년의 발전 모습을 수치로 확인하여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경우 이를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권리 기반 마련’ 사업에는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3년주기),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년주기) 등 일정 간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연도별 예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시행계획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예산이 큰 폭으로 변함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예산에 변화를 보인 20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이 명확히 예산 변화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성과지표 역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변경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산변화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을 추적·확인할 수가 없어 기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또한, 성과목표의 변동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중단적인 성과관리 및 과제 추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과 성과지표가 변하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행계획에 제시된 각 사업의 세부과제와 성과지표 간에 상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사업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치나 기대하고자 하는 성과 등을 성과지표라 했을 때, 목적에 맞는 목표를 확인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둘 사이의 상관성일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소 수’의 증가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족한 참여위원회의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에 ‘취약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침 시달’ 횟수를 확인하는 등의 단순 시행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세부과제와 성과지표 간에 의미가 불명확한 사업은 그 사업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의 설정은 기본계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행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하거나 추상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제언사항[10, 11, 12]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정책 자체가 청소년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을 일정 기간을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점검하는 과정 평가와 종결 시점에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총괄 평가적 요소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권리영역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과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예산의 증감여부와 같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수행되어 구체적인 내용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정책의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책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요소가 담긴 내용분석이 시행되었으나, 실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 요인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평가는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어 대내외 변화요인과 기본계획상 성과(주요)지표를 비교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형성과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후속연구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여성가족부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정부종합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MOGEF (2018). The 6th Youth Policy Action Plan. Official Master plan Re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2. 여성가족부 (2022).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MOGEF (2022). 2022 Youth White Pap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3. 유성렬, 김진호, 이민호,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 평가 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15-56, 서울. 여성가족부. (Ryu S.Y, Kim J.H, Lee M.H (2015). A Study on the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Research Report, 2015-5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4. 고숙희, 김영희, 서동희 (2006).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연구보고서, 06-R20,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KO S.H, Kim Y.H, Seo D,H (2006). Social change in the 21st century and the importance of youth policy. Research Report, 06-R20,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eoul, Republic of Korea)
5. 김주환 (2006).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 비교연구: 정책평가관련 법 및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4), 57-88. (Kim J.H (2006).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cy Evaluation System in Korean and Japan Government: centered on regulations of policy evaluatio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Journal, 16(4), 57-88.)
6. 홍형득 (2011). 성과관리와 정책평가 연구의 특성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39-59. (Hong H.D (2011). Network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6(4), 57-88)
7. 노화준 (2015).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Roh H.J (2015). Policy Evaluation. Beopmun Press. Seoul, Republic of Korea)
8. 성윤숙, 임희진 (2007).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청소년 2007-3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Sung Y,S, Lim H.J (2007).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Youth Policy by Local Governments in 2007. Research Report, 2007-34, National Youth Committee. Seoul, Republic of Korea)
9. 김형주, 김영애, 조선하 (2009).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H.J, Kim Y.E, JO S.H (2009)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hild and youth policy evaluation model. Research Paper, 09-R02.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eoul, Republic of Korea)

10. 이창호, 최용환 (2016). 청소년정책평가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Lee C.H, Choi Y.H (2016). Current Status and Tasks of Youth Policy Evaluation. Presentation Pap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1.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Lee C.H, Choi Y.H, Doo S. K. (2016).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of Youth Policy. Research Report, 16-R02.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12. Gilsing, R. (2007).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ance the case of Dutch youth poli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3(1), 45-64.